

2016 IGE/KITA Global Trade Forum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전망**

Allies in Business:  
The Future of the  
U.S.-ROK Economic Relationship

HE Mark W. Lippert



## 마크 리퍼트

— · —

Mark W. Lippert · 주한미국대사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담당 차관보, 척 헤이글 (Chuck Hagel) 미국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방부 고위직 등을 역임(2012년 5월-2014년 9월)한 바 있으며 국내외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과 정책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 바 있음.

#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전망<sup>1</sup>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쁩니다. 사공일 이사장님의 친절한 소개와 세계경제연구원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강연을 주최해 주신 세계경제연구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세계경제연구원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연구원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한미국대사관과 협력하여 왔습니다. 세계경제연구원은 저를 포함해서 신입 외교관까지 저희 대사관의 모두가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경제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 정책입안자, 경제학자, 언론인, 외교관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세계경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경제연구원에서 한미 경제 관계에 대해 강연할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미 동맹에서 양국 국민의 공동의 번영이 매우 중요하

---

<sup>1</sup> 본 글은 2016년 6월 1일 IGE/KITA 세계무역포럼에서 마크 리퍼트(Mark W. Lippert) 주한미국대사가 강연한 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이 견해는 강연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본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양국 정부, 정상,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한미 관계는 양국 경제가 활기가 넘치고 회복력을 보이며 성장할 때 최고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좋은 보수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상품 비용을 낮추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부여하고,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보장할 때 최상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저는 오늘 한미 양국의 경제 관계가 아주 견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견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몇 가지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2년 이후 전체 교역 규모는 약 1,300억 달러에서 거의 1,500억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 한국의 대미 외국인 직접투자는 360억 달러로 거의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 미국은 한국에 대한 최대 외국 투자국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2%가 상승한 55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 한국은 현재 미국의 6위 교역국이고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 교역국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미 양국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인 공동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열쇠는 기존의 강력한 양자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

다. 상호 협력을 통해 한미 양국은 21세기 생존과 성공을 담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경제 협력은 분명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기업 경쟁 및 기타 요소들이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낙관적으로 생각할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양국의 정치, 경제 정책 목표는 전에 없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양국 정부와 경제 리더들 모두 동일한 목표를 공유합니다. 당연히 일자리 창출을 원합니다. 우리는 투자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성장을 원합니다. 또한 개방과 혁신, 그리고 규제 협력 및 일관성의 확대를 원합니다. 이는 한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양국의 기업 및 무역 관계의 구조와 성격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상호 유익한 기업 협력이 가능한 새롭고 흥미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연히 양국 기업들은 서로 그리고 전 세계 다른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경쟁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기업 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부터 기술, 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양국 민간 기업들은 변화하고 있는 양국 경제의 특

성 덕분에 새롭고 흥미로우면서도 수익성 있는 상호 기업하는 방식을 찾기 시작했고 이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non-zero sum) 양자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요와 원유 및 가스 부문의 구성과 더불어 원유 수출 금지 해제와 초경질유(condensate)에 관한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일부는 단기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마 차후에는 더욱 심도 있는 에너지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새로운 사이버보안센터(Cyber-Crime Center)도 협력과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일주일 전에 내한한 미국 사이버보안 무역 사절단의 방문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국 3M과 LG의 협력 관계는 정말 대단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항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로 과학기술, 창조 산업, 금융 서비스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분야에서 한미 양국 국민과 산업 간에 강력하면서도 서로를 강화시키는 전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파트너십, 특히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적절한 법률, 규제 및 무역 구조로 지원하고 촉진한다면 상당한 추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 미국 창업투자회사(venture capital firm)가 한국 스타트업 회사들과 협력합니다.
- 한국 지사가 있는 일부 미국 최고 기업에서 한국 학생을 고용합니다.
- 소규모 미국 스타트업 회사들이 한국에서 파트너와 직원을 찾습니다.

요약하면, 정책 조정, 경제적 이해와 구조의 융합, 그리고 심도 있고 상호강화적인 전문성이 한미 양국 관계의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입니다.

분명 이런 잠재력을 실현하기까지 많은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한 동맹은 힘겨운 도전을 함께 이겨내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공동의 우선순위를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박사가 말했듯이,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양국 공통의 경제 어젠다를 진전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해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전면 이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미FTA를 토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 특히 우리의 공동 목표인 규제 개혁과 조정을 중심으로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매일같이 양국이 힘쓰고 있는 공동의 경제 가치를 보장하는 경제 정책 관련 공조와 협력을 확대하여 전 세계 다른 국가에 확산시키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을 포함한 다자간 경제 포럼에서 선제적으로 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한미FTA 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미 양국 관계를 낙관하고, 기존의 경제 파트너십이 강화 및 심화되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두 나라가 한미FTA를 전면 이행에 대한 상호 의지 덕분입니다. 한미FTA는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입니다. 한미FTA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모방하는 매우 수준 높은 협정입니다.

확실히 한미FTA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매우 느리기도 했지만 강력한 진전을 보이며 시장 개방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한미국대사를 지내는 동안 양국 정부와 민간 부문 대표들은 원산지 규정이 투명성과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 협력하여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설치하면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혁신을 장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 서비스의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미FTA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사업을 하기에는 여전히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은 한미FTA의 전면 이행을 위해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 서비스 부문을 개방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서비스 부문은 변호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면 법률 자문의 질이 향상되고, 한국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들의 고용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이는 한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법무 수수료가 줄어들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재무제표상 법률 수수료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입니다.

또한 상품이 통관되는 절차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송 기업들에게는 기본이 되는 신속하고 민첩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미FTA의 강력한 이행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할 몇몇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양국 경제 관계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는 한미FTA의 이행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점점 더 기술적으로는 한미FTA 범주의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문제들은 종종 한미FTA의 이행 문제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양국이 한미FTA의 과정을 통해 강화하고 간소화하려는 부문 및 산업 중 여러 부문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한미FTA 이후”에 발생한 문제는 한미FTA의 정신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양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양자 문제들에 속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전이야말로 양국 경제 관계를 다음 단계의 공동 번영으로 발전시키는 열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전반적 사업 환경 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한 한미 양국 관계는 한미FTA의 견고한 기반 위에 있습니다. 양국 정부가 경제 정책 목표를 공유하며, 한미 양국 재계가 여러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협력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한국에서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심화시키고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번영을 보장하는 21세기를 위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개혁, 양자 참여, 여러 다자간 포럼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국내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윤곽은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최근 OECD 경제조사(OECD Economic Survey)에서 한국 정부가 G20에 제출한 구조개혁이 잠재력이 매우 크고 수출 성장을 재촉시킬 수 있으며 수출 감소를 되돌릴 수도 있다고 주목한 점이 매우 안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각계각층의 많은 한국인들이 저에게 반복적으로 언급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소규모 기업가, 정부 관료, 대기업 임원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인과 한국인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여러 가지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규제 개혁과 일치 및 일관성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군사 동맹에서 양국군은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전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심도 있는 상호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 관계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통된 규제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기업들이 각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발전을 저해하는 시장 비효율과 왜곡이 사라질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비교한 점을 보면, 경제의 상호 운용도 개선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경제 관련 장관들에게 “규제 완화는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새로운 성장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를 극대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문제를 잘 설명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경제 및 재정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여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미국도 이 목표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이에 화답할 것입니다. 2015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와)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개혁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의 대표적인 이니셔티브, 셀렉트 USA(SelectUSA)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셀렉트 USA는 미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팀은 매일 아침 한 가지 사명을 안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투자를 미국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셀렉트USA를 구상한 이유는 우리 국제 파트너들이 [미국에서] 최고의 기회를 손쉽게 발견하게끔 돕기 위함입니다.” 이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라는 목표를 공유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

리한 이니셔티브가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왜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째, 한국에만 존재하는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업 규제가 너무 많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자동차 부문에 이르기까지 “차량 좌석 넓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든가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별도의 데이터 서버를 두라는 요건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두 가지 규제 언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한국용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시장용 언어입니다.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고 비효율이 생겨납니다. 또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특히 해외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 및 외국인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상의 없이 단기적 시각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규제는 흔히 공통되고 명확히 정의된 해석의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료들의 직무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이런 규정의 해석과 적용도 급격히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관료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왜곡과 불확실성이 발생합니다.

종합하면 이 문제들은 한국과 외국 기업에 있어 불필요한 장

애물이자,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자유무역 환경을 저해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과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에 특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한국 기업은 귀중한 잠재적 파트너십을 잃게 되며, 한국 국민은 잠재적인 고용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미국 기업은 신입부터 한국 법인 최고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자리를 한국인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은 목적이 분명한 시장 활동 대신 불필요한 국내 규제를 준수하는 데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제 리더십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환경이 성장과 일자리에 좋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불필요하거나 독특한 규제를 도입하면 한국, 미국 및 다른 국제 기업들이 성과를 달성하는 길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인 이 시대에 고용이 줄어듭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감소합니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연구개발, 인프라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지출도 적어집니다. 자본 향상은 지연되거나 간과됩니다. 게다가 수출 기회에 집중할 자원도 줄어듭니다.

다행인 뉴스라면 이것은 경제의 깊은 구조적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책 입안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양국 대통령 선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신념과 정치적 의지가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는 이미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여러 구체적 성과를 낸 성공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매우 개방적인 자세로 수렴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이 안전하지만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국경 간 이동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 외국인 투자 ombudsman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규제 정보 포털을 설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포털은 영어로 된 의견도 기꺼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는 마주 앉아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습니다. 바로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모든 항공사가 한국에 착륙하는 각 항공기의 상세한 유지·관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항공사의 경쟁력과 보안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미국상공회의소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소속 기업들과 일련의 간담회를 열어 기업 환경에 대한 피드백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위의 예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취한 이 모든 유용한 조치들은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모두 유용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권고안과 일치합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안된 규제들에 관해 한국과 외국 기업에게 적절히 고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두는 것도 포함됩니다.
-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실질적 개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실행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실무 규제 담당관들이 규제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각 정부 부처 내부와 전체에서 규제에 대한 해석을 폭넓게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공동 발전에 긍지를 느끼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좋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마무리하자면 규제 개혁, 조정 및 일관성은 퍼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노동, 통화 등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고 OECD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규제 개혁, 조정 및 일관성에 관한 공동의 목표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룬다면,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역동적인 기업 환경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정부 규제는 필요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나 제품 안전, 공공의 이익에 있어 중요합니다.

그러니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규제를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균형을 찾자는 뜻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개방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한미 양국 시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조와 협력을 확대하여 이러한 공동의 경제적 가치를 다른 나라로 확대하고 다자간 경제 포럼에서 고취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한미 양국 간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모범 관행을 구축하는 한편, 이러한 모범 관

행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자유롭고 개방적인 거래, 인권 보호와 같이 대부분의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양국의 외교 관계는 말하자면 “세계화”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경제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미 양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공정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규범을 만들 기회를 환영합니다. 여기에는 규제 설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그리고 비용-편익 분석 측면의 모범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정부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영국의 규제 기관과 협의하고, OECD와 호주 관료 및 전문가와 함께 규제 모범 사례에 관한 회의에도 참여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규제 정보와 접근 방식에 관한 교류를 위한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기대합니다.

협력은 양국의 무역과 규제 언어를 일치시키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국의 협력은 이 지역의 규범을 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연두교서에도 나타났듯이, 미국과 한국처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의 경제 통상 규범을 정하지 않으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

은 양국이 한미FTA 협상 당시 그토록 애써서 정한 높은 기준에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규범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다자간 포럼에서만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처럼 생각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동의 관심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들 나라의 기업하기 규범과 규제를 우리의 공동 기준에 맞게 하고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지역의 통상 규범에 대해 다루려면 TPP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TPP는 태평양 경제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통상 규범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의 규제 언어를 발전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TPP는 일관되고 건전한 규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협정에 규제 일관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PP는 스마트 규제 개발 시 중앙집중식 기관 간 협조가 중요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비용, 편익, 리스크 및 자유무역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이 TPP에 참여할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말했고, 미국은 한국의 관심 표현을 환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미 양국이 TPP에 관한 ‘협의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여러 TPP의 무사항에 서명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국은 TPP에 참여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지만,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하려면 무역, 노동, 환경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해결해야 할 기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TPP 가입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한국이 최대한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미국도 국내에서 TPP가 그에 걸맞은 관심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의 의회 비준에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의 단기 목표는 국내 절차 완료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TPP의 이익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TPP 회원국 및 기타 TPP 지지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결론

저는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한미 양국 정부와 기업이 양자 경제 관계에서 직면한 다수의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 해결책에서 대체로 같은 의견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국 업계의 좋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성공을 거둔 오

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논의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낙관합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급, 혁신의 역사, 교육 수준이 높은 국민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발 성공 사례, 공동의 가치, 일부 최고 기업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가장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63년간 변함없이 유지된 영원한 동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는 번영의 다음 장을 써나갈 것입니다. 이런 자산을 기초로 공동의 경제 및 무역 이익을 진전시키고 양국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한미 경제 협력 : 현황과 전망  
**질의 응답**

Q

저는 한미 경제 관계를 낙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 공감합니다. 또한 한미FTA의 세 가지 우선 순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한미FTA가 발효된 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무역이 확대되는 중에는 다소간의 마찰과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제 생각에는 양국의 대화를 향상시킬 제도적 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양자 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충분합니다. 이것으로는 대사가님이 말씀하신 마찰과 분쟁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입니까? 부족하다면 다른 협력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기본적으로 한미FTA에는 매우 중요한 대화 및 마찰 해결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이 한미FTA의 강점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덕분에 한미 양국 정부와 산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건전한 기반과 프레임워크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미FTA가 큰 성공으로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질문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한미FTA 밖에서는 이른바 ‘더 넓은 기업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바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중복되지 않는 방법이 두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미FTA의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하거나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미FTA를 폭넓게 해석해야 하겠지만,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같은 메커니즘의 상당수가 성공을 거둔 것을 고려할 때, 시작점으로 좋습니다. 둘째, 한미 양국의 산업이 긴밀히 협조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공회의소도 정부를 위해 이런 문

제의 해결 준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측 민간 부문과 정부 사이에 이해가 일치하는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더 많은 메커니즘과 제도가 필요한가?’라고 자문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탐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미국 국무차관과 한국 외교차관 선에서 첫 국무부 경제 대화가 있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 체계적 혹은 비체계적 회답이나 회의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문제 해결에 대한 초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Q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미 경제 관계의 미래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A

세계 미국 선거를 예측해보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데, 이는 미국 국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보여 왔고 그것은 앞으로 남은 몇 개월의 임기 동안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 미국 공화당 소속 의회 대표단이 방문하였습니다. 이 대표단도 한미 경제 관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Q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여 북한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시나요?



**A**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및 동맹국의 정책과 발맞출 것이고,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유례없는 다자간 제재를 전면적이고 확고하게 이행할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중국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를 몇 가지 취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Q**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한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습니까?

**A**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제재는 단기 게임이 아니라 장기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 제재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또 다른 교훈은 다자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중국, 러시아와 협력한 덕분에 제재가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담하기에는 이릅니다. 무역 흐름이 다소 하락했다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중국이 각 부처와 세관에 제재를 더욱 강력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는 흥미로운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몇 주 뒤에 있을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이를 중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다소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것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양한 단계에서 중국과 연계하면서 이 문제를 진척시켜야 합니다.

**Q** 미국 의회에서 TPP를 비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A

미국 의회의 행보를 추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열성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최종 비준을 위한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행정부 전체가 개입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료들이 방송에서 TPP에 대해 이야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의회를 설득하고, 상공회의소는 국민을 설득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 접근법입니다.



## **HE Mark W. Lippert**

Mark W. Lippert is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He previously held senior positions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from May 2012 until September 2014. This included chief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 Chuck Hagel, and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n and Pacific Security Affairs, where he was the principal advisor to the Secretary of Defense on all inter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Asia and the Pacific.

# **Allies in Business: The Future of the U.S.-ROK Economic Relationship<sup>1</sup>**

**HE Mark W. Lippert**

US Ambassador to Korea

Hello everyone. It's a pleasure to be here today. Thank you, Chairman SaKong, for the kind introduction and for your leadership at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and my thanks to IGE for so graciously hosting this event.

We owe IGE a debt of gratitude. IGE has kept its doors open to the U.S. Embassy. It has helped us all – from the Ambassador to entry-level diplomats – to better understand the economic issues that shape the present and will shape the future of Korea and the region. As business leaders, policymakers, economists, journalists, and diplomats, we all benefit tremendously from the service that IGE provides. So, for those reasons, I very much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speak here at IGE about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Let's begin with this point: the shared prosperity of two peoples, our two nations, is an incredibly important part of

---

<sup>1</sup> This is the transcript of the speech by HE Ambassador Mark W. Lippert at the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June 1, 2016.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the speaker's.

the U.S.-ROK alliance. It is a critical priority for both of our governments, both our presidents and both of our peoples. Our relationship is at its very best when our economies are vibrant, resilient, and growing. It is at its very best when we are creating more good paying jobs, lowering the costs of goods, giving more choice to consumers, and ensuring a dynamic private sector.

And, I am here to report that, today, our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is extremely strong –arguably the strongest it’s ever been. Let me give you just a few numbers to support that claim:

- Since 2012, the overall trading relationship has grown from nearly \$130 billion to almost \$150 billion.
-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has nearly doubled to \$36 billion.
- The United States is the largest foreign investor in South Korea, investing \$5.5 billion last year, up 52 percent from a year ago.
- Korea is now the 6<sup>th</sup> largest trading partner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is South Korea’s 2<sup>nd</sup> largest trading partner.

At the same time, both of our countries face economic challenges. Accordingly, now more than ever, a key to ensuring our continued, shared prosperity is improving our

already strong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By working together, we can help to ensure success and viability for our two nations well into the 21<sup>st</sup> century.

To be sure, economic cooperation can be difficult: national interests, commercial competition, and other factors can be serious impediments. Bu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 am convinced that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for optimism.

First – in an unprecedented way – our political and economic policy goals have come into very close alignment. In short, our governments and our economic leaders, both want the same things. Naturally, we want job creation. We want investment and sustainable, equitable economic growth. And we want openness, innovation, and greater regulatory alignment and coherence. These will help to drive our shared prosperity to new heights.

Second, the structure and nature of our commercial and trading relationship has changed over time. It has now reached a point where there are new and exciting opportunities for mutually beneficial commercial cooperation. To be sure, our companies will aggressively compete with one another – and with other companies around the world. We would not want it any other way.

But, it is clear that new business opportunities are arising between American and Korean firms. From agriculture to

technology to retailing to manufacturing to services, our private companies – thanks to the changing nature of our economies – are starting to find new, exciting, and profitable ways to do business with one another – increasingly adding to the non-zero sum nature of our economic relationship.

Let me briefly provide a few examples.

The lifting of the crude oil ban and a change in U.S. policy towards condensates – coupled with the demand for energy here and the composition of the Korean oil and gas sector – presents new opportunities. Some are short-term; some, perhaps for later on, for deeper energy collaboration.

The new Microsoft Cyber-Crime Center represents another exciting area of emerging cooperation and commercial activity, which was visited by a highly successful U.S. cybersecurity trade mission just over a week ago. And, the little-known relationship between 3M Korea and LG is truly remarkable.

Third, and closely related to points one and two, there is strong, mutually-reinforcing expertise between our two peoples and industries in priority areas – areas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creative industries, and financial services.

If these natural partnerships, especially amo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supported and facilitated by the

appropriate legal, regulatory, and trading structures, there is and will be the potential to unlock substantial, additional growth. Think of some of the opportunities:

- American venture capital firms working with Korean start-ups.
- Korean students getting hired by some of America’s best firms with operations right here in Korea.
- Smaller American start-ups finding partners and employees here in Korea.

In short, policy alignment, convergence of economic interests and structure, and deep and mutually-reinforcing expertise are reasons for heady optimism about the future of this relationship.

Let me be clear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difficult work ahead to unlock this potential. But, as I’ve said before, true allies take on tough challenges together. And, for the sake of our future and for the sake of our shared priorities, we have to act now.

As Dr. Martin Luther King once said, “There is such a thing as being too late.” So, with that in mind, I would like to take a minute to outline three priority areas where we can move forward our common economic agenda:

The first area is full implementation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or KORUS.

Two, moving beyond and building on KORUS, to ensure a dynamic and innovative business environment, especially through our common goals of regulatory reform and alignment.

Three, increasing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on economic policy to ensure our shared economic values -- that we work on every day bilaterally -- are spread to other capitals around the world and are advanced proactively in multilateral economic fora – includ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Let me first turn to KORUS implementation.

Many of the reasons for the optimism that I just mentioned, and for the strong and deep economic partnership we already have, are thanks to our mutual commitment to full implementation of KORUS. KORUS is a key pillar of our economic relationship. It is a very high standard agreement that is envied and copied by the rest of the world.

To be sure, there has been strong – albeit at times too slow – progress on KORUS implementation, resulting in a number of market-opening achievements.

For example, during my time as Ambassador, our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have collaborated to bring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to rules

of origin. We have worked together to promote innovation in the auto sector by providing credits to automakers when they develop and install new technologies that reduce emissions. And we have worked to improve cross-border data flows for financial services, to name just a few.

There is no doubt that KORUS has eliminated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improved transparency, and strengthene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Nevertheless, this can still be a tougher place to do business than it should be. And, part of the way to remedy this is to work through the outstanding issues to achieve full KORUS implementation.

For example, we need to open up the legal services sector – especially as it relates to the restrictions on areas in which lawyers can practice. This will improve the quality of legal counsel, create new jobs for Korean lawyers, and expand the employment choices open to them. It will reduce legal fees for companies doing business in Korea making firms more competitive and reducing legal fees on their balance sheet, and it will offer consumers a wider range of choices.

We also need to ensure there is no backsliding on the commitments we made to provide for smooth and efficient clearance of goods through customs. We must ensure our express delivery companies can operate expeditiously and quickly – which is fundamental to their business.

There are a few other areas in which we need to work to assure strong implementation. But, I feel confident that we will achieve our shared objective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a strong track record of success in this area.

But, we can do better, and dream bigger. Even if all of these issues are successfully resolved, we are still far from unlocking the full potential of this economic relationship. In fact, because, in part, of the strong progress we have made in KORUS implementation, increasingly, the issues we face technically fall outside the letter of the KORUS agreement. They are often confused with KORUS implementation because they affect many of the same sectors and industries we were trying to enhance and streamline through the KORUS processes.

These “post-KORUS” issues, if you will, are more about the spirit of KORUS, and they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bilateral issues we face today. Progress on these issues is key to taking our economic relationship towards the next level of shared prosperity.

This brings me to my second topic: improving the general business environment. Because the strength of our relationship is based on the strong KORUS foundation; because our two governments are aligned on economic policy goals; and because both American and Korean business communities are on the same page on many issues, we now

have a historically unique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We have the opportunity – like never before – to work together to deepen and further add to dynamic and innovative commercial environment here in South Korea, an environment that creates jobs, spurs growth, and ensures prosperity for the 21<sup>st</sup> century.

To be sure, this environment requires a multifaceted approach that incorporates domestic reform, bilateral engagement, and multilateral fora. Much of this involves domestic issues, the contours of which are for the Korean people, the Korean government to decide. For those reasons, I won't go into detail, only to say that it is reassuring to see that the recent OECD Economic Survey for Korea noted that the structural reforms the government has presented to the G20 have great potential and could reignite export growth and reverse the decline in exports.

That being said, I do want to focus on one set of issues that people in Korea from all walks of life have mentioned to me repeatedly. From small business owners to government officials to executives leading large companies, I have heard these same issues raised by Americans and Koreans alike – concerning a wide range of commercial activities here in Korea.

The common refrain is the need for greater regulatory reform, alignment, and coherence.

In our military alliance, our armed forces strive for deeper interoperability in order to work better together and enhance their fighting efficacy. Akin to that relationship, we need common regulatory language between our two nations – as well as with the rest of the world. This will help our economies work better together, will help our companies to find more opportunitie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and will remove market inefficiencies and distortions that would otherwise hold us back.

To come back to the comparison above, it will improve our economic interoperability. President Park described this issue well when she told economic ministers in May that “deregula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of maximizing the private sector’s creativeness and investment to build new growth sectors.” Deputy Prime Minister Yoo Il-ho amplified President Park’s very welcome statement when he declar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improve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in its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to remove any discriminatory measures against foreign investors.”

The United State strongly shares that goal, and we will reciprocate. During the October 2015 summit meeting in Washington, President Obama said: “President Park [and I] discussed the regulatory reforms she is pursuing. Those are reforms we welcome.”

President Obama also spoke passionately about one of

his signature initiatives, SelectUSA, which is designed to improve the commercial climate in the United States for foreign companies: “[This] team wakes up every morning with one mission - bringing job-creating investment to the United States. The idea behind SelectUSA is to make it easier for our international partners to find the best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It’s clear. We share the goals of a fair, transparent, and predictable regulatory environment based on global standards.

Let’s unpack that statement just a bit further. Why is this so important? Why do we need a fair, transparent, and predictable regulatory environment based on global standards? Let me give you three reasons:

One: There is widespread recognition that there are too many business regulations that are unique to Korea – regulations that do not follow international norms. From cloud computing to the automobile sector, I frequently hear statements like: “Korea is the only country with these specific requirements for vehicle seat width,” or,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requires us to have a separate server for this data.” Korea-unique regulations continue to force companies to speak two regulatory languages: one here and at least one other language in overseas markets. This creates costs and inefficiencies, and it does so for not just for U.S companies, but also for Korean firms, particularly those that are trying to compete abroad.

Two: Regulations are often instituted with short-time horizons without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Korean and foreign stakeholders - those directly affected by the regulations.

Three: Regulations often lack a common, clearly-defined standard for interpretation. And, when officials change jobs or circumstances chang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regulations can rapidly change. Even when officials or circumstances don't change, the variance of interpretations can be wide and varied – causing distortion and uncertainty in the market.

Taken together, these issues present needless obstacles to both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and they hinder the free-trade environment for which we are both striving – especially Korea with its multitude of FTA with nations all around the world.

They can dissuade a U.S. company from entering South Korea – depriving Korean companies of potentially valuable partnerships and depriving Korean citizens of potential job opportunities since U.S. firms here in Korea overwhelmingly hire Koreans to fill most of their positions, from entry-level to country CEO. They also cause Korean companies to spend valuable time and effort on complying with unnecessary domestic regulations, when those Korean companies could be using those same resources to pursue purposeful market activities.

This is a room filled with leading economic minds. So, I am saying something you already know well: fair, predictable, and transparent environments are good for growth and good for jobs. We make it harder than it should – for Korean, American and other international companies -- to deliver those results when we adopt unnecessary, or unique, regulations.

Fewer people are hired -- at a time when youth unemployment is a serious issue. There is less foreign direct investment – something that an overwhelming number of economic experts say is very much needed here in South Korea. There is less spending on R&D,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Capital improvements are delayed or forgotten. And, there are fewer resources devoted to export opportunities.

The good news is that these are not deep structural issues with the economy – they are issues that can be readily solved through policy-making. And, as I mentioned earlier, there is strong commitment and political will on both sides – going all the way up to our two Presidents – to engage on these issues.

More good news is we already have several success stories, tangible results wher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worked together to resolve issues or make significant progress. Let me give you just a few examples: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demonstrated a profound openness to stakeholder input. Moreover, we are hopeful that we will build on this success to achieve coherent regulations that enable multinational companies to manage and move their data across borders in a secure but cost-efficient way.
- The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has established a regulatory information portal to improve transparency and solicit stakeholder input. Not only that, the portal gladly accepts comments in English.
-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shown a willingness to sit down and gather stakeholder input. Just yesterday, KFTC announced the revision of a regulation that would have required all airlines – domestic and foreign – to publish detailed maintenance records for each aircraft that lands in South Korea. Such a regulation exists nowhere else in the world and could have threatened the airlines’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 And Deputy Prime Minister Yoo recently offered to convene a series of meetings with member companie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to solicit feedback on the business environment.

All of these helpful actions — actions that the ROK government has taken — are in line with recommendations by AMCHAM and the U.S. Embassy that both believe would be

helpful:

- Further increasing the scale and scope of stakeholder consultations, including appropriate notification and comment periods for proposed regulations, with both Korean and foreign firms.
- Transforming policies and initiatives into tangible reforms – which I recognize is easier said than done.
- Ensuring that reforms are consistently applied by working-level regulators, and that interpretations are broadly shared across and within government ministries.

So, I am proud of our collective progress but also mindful that more work needs to be done. We look forward to working together with our great partners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Let me wrap up this section by saying we know that regulatory reform, alignment, and coherence is only one part of the puzzle. There are other tough issues – labor and currency to name just two – that also need to be addressed. But, as I mentioned earlier the government here in Seoul has put forward a plan, highly rated by the OECD, to address these issues.

But, if we can make substantial progress on this shared goal of regulatory reform, alignment, and coherence, that will go a long, long way toward helping facilitate the dynamic

commercial environment we all want in South Korea.

I should also say this. We know that many government regulations are both necessary and important: they are important for consumer protection, important for product safety, important for the public good.

So don't get me wrong. I am not saying, let's get rid of all regulations. What I am saying is: "Let's work together to find the right balance. Let's work together to ensure our markets are open, competitive, and governed by the same rules. Let's work together to ensure our shared prosperity. We are great nations capable of doing so."

This brings me to my third and final topic: increasing our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so that these shared economic values are spread to other capitals and promoted in multilateral economic fora.

In short, while we are working to forge best practices here in South Korea between our nations and with other like-minded states, it is essential that we also bring these best practices to the rest of the world.

Because our two countries share many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 such as a commitment to democracy, free and open commerce,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our diplomatic relationship has “gone global,” so to speak. We are now working around the globe to tackle some of the world's

toughest issues.

Our economic relationship should be no exception. We welcome opportunities for our respective governments and companies to collaborate and make rules of the road that are fair, consistent, and transparent. This includes best practices in regulatory design, stakeholder consultation, and cost-benefit analysis.

Here, once again, Seoul has demonstrated a proactive, forward-leaning approach. The Park administration has consulted with regulatory offices in the United Kingdom, and has participated in workshops in regulatory best practices with the OECD and with Australian officials and experts.

Our respective governments also have established channels for exchanging regulatory information and approaches. I look forward to opportunities to expand this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is important not only to get our trade and regulatory languages in sync. Our collaboration also can help establish rules of the road for the region. As reflected in President Obama's last State of the Union speech, if like-mind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do not set the rules of economic engagement for the world's fastest-growing region, then others, including China, will. And they will not meet our high standards – especially those that we worked so hard to negotiate in the KORUS FTA.

We should write those rules. And that means not just in multilateral fora.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together with other like-minded counterparts -- also need to engage on shared issues of interest in other capitals. We need to ensure that the rules and regulations for doing business there meet our collective standards and address our stakeholders’ concerns. We should ensure a level playing field that ensures fair and open competition.

Talking about rules of the road for the region requires us to talk about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The TPP is the most prominent means for a Pacific economy to help establish rules of the road in the broader region. That includes moving toward a common regulatory language. TPP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onsistent and sound regulation, and that is why there is a regulatory coherence chapter in the agreement. The TPP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entralized, interagency coordination in developing smart regulations, written in plain language, and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osts, benefits, risks, and consequences of free trad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President Park has said that South Korea is a “natural partner” to join TPP, and we welcome South Korea’s expression of interest.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Park pledged last October that both of our nations would “accelerate consultations” on TPP. The good news is that

South Korea has already signed on to many of the TPP's obligations.

Korea is well positioned regarding TPP, but joining TPP will not be automatic. It would require South Korea to make new commitments in a number of areas, including trade, labor, and the environment. Beyond those commitments, there are other issues that will need to be addressed and, while those issues are not pre-conditions,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be ready to resolve them as quickly as possible.

Meanwhile, the United States also has its own work to do to ensure TPP is given the consideration it deserves at home. President Obama is very focused on the passage of TPP, and the near-term goal in Washington is to continue to focus on completing our domestic procedures.

We do recognize the benefits and the importance of TPP and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our Congress, TPP members, and other "friends of TPP" in the coming weeks and months.

## **Conclusion**

Let me conclude by saying I am extremely optimistic. I am optimistic because our governments and companies largely share the same view on many of the challenges and the potential remedies for the issues that confront our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I am optimistic because our two nations, working with great partners in industry, have a long track record of success.

I am optimistic because of the things that together we bring to the table: the world's largest energy supply, a history of innovation, deeply educated people, the greatest development success story in history, shared values, some of the world's best companies, strong political leadership, the highest standard FTA, and our enduring alliance that has been through thick and thin for 63 years.

It is on that foundation that the next chapter of prosperity will be written. It is on that foundation that the shared economic and commercial interests will be advanced, and it is on that shared foundation that our two nations will become even stronger – helping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generations to come.

In short, we have a storied past, we are working in unprecedented ways in the present, and we have an extremely bright future ahead.



---

Allies in Business: The Future of the U.S.-ROK  
Economic Relationship

**Questions and Answers**



**Q** In fact, I join with your judgment call that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for optimism on the Korea-US economic relations. I also share your three priority areas. On the KORUS FTA, in fact after the KORUS FTA entered into forc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expanded dramatically. Frictions and disputes are quite natural in the course of trade expansion. In my view, there are many institutional frameworks to enhance dialogue between the two parties. Also, there is strong political will to promote bilateral relations on both sides. Is it not sufficient to address the frictions and disputes that you are raising? If not, what other avenues are there for cooperation?

**A** I would say I think you are right fundamentally that there are really important dialogue and friction-resolving mechanisms built into KORUS. That is part of its strength. It gave the two governments and our industries some very sound foundations and frameworks to resolve issues. That has been one of the reasons for the great success of KORUS. To get to the heart of your question, I would say that it is still a work in progress. As we move outside of KORUS, one of the challenges is grappling with what we call the larger business environment. Off the top of my head, I think there are two or three things we can do that are not mutually exclusive in many ways and are overlapping.

First, we can use or expand the existing mechanisms in KORUS. That would probably require a broader

interpretation of KORUS but I think it is one way to go. Given the successful track record of many of these mechanisms, it is a good place to start. The second is that I think our two industries can also work closely together. Our two chambers of commerce can also perhaps, for our governments, help tee up those issues. In other words, there are areas of common interests among both of our private sectors and present those to our two governments. Third, you are into the space of “do we need more mechanisms and more institutions” and that is something we should explore, going forward. New dialogues, for example, might be helpful. We just were able to have the first State Department economic dialogue a few months ago at our Under Secretarial level and at the Vice Foreign Minister level. That has proved very promising. Perhaps, that and other similar types of dialogues or venues, either formal or informal, and structured or unstructured, could also be part of the solution. In those three areas, you could find mutually reinforcing focuses to resolve those issues.



If Donald Trump were to become president, what do you think the future of the Korea-US economic relationship would look like?



You are asking me to speculate about the American election and that is the job of the American people. I will say, however, that there is a strong continuing interest of free trade in Obama’s cabinet and it will continue in his remaining few months.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was a Republican congressional delegation recently in Korea. They expressed a strong commitment to the US-Korea economic relationship.



Is the US going to persuade China to join in mor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ur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remains the same. We are lock stepped with South Korea and allies and strongly committed to full and robust implementation of unprecedented multilateral sanctions that we worked hard to get through. The Chinese have done some things we view as helpful, but ultimately, more still needs to be done, and that is where our commitment lies at this point.



Do you have any concrete evidence for China having done anything to push North Korea?



The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that sanctions are not just a short term game, but it is the longer term game. That is really one of the key lessons the US took away from the Iran context. The other big lesson we took away from the Iran context was that you have to have multilateral sanctions. By working together with the Europeans,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the sanctions were so effective. But it is still too early to tell. We have seen some interesting data that has shown that there is a little bit of trade flow going down. There have been some interesting things where the Chinese have instructed ministries and

customs agencies to undertake more robust enforcement. This will be a key topic at the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that is coming up with the Chinese and the US in a few weeks. I think we have seen some progress but I just want to reiterate that the jury is still out. This is a medium and long-term endeavor and that is exactly why we need to keep engaging the Chinese at various levels to make progress on this very issue.



What is the likelihood that the TPP will be ratified in Congress?



I do not want to speculate on what our legislative branch might do. I can say that the President remains firmly committed. This is one of the top remaining issues for him in his last months in office and he continues to actively work this issue to prepare the ground for eventual ratification. The whole administration is involved and engaged. We have Cabinet members talking about TPP on TV. The White House is pressuring Congress and the Chamber of Commerce is pursuing a grassroots strategy. This is a concrete approach.